

지난 千年 韓國經濟史의 4가지 爭點: 統合的 接近의 試圖

李 根·李 憲 昶

지난 천년의 한국경제사에는 네 가지 쟁점이 파악된다. 첫째, 조선사회정체론과 내재적 발전론의 대립, 둘째, 식민지수탈론과 식민지공업화론의 대립, 셋째, 박정희 시대의 고도 성장의 원인에 대해서 시장주의적 입장과 정부의 개입주의적 입장의 대립, 넷째, 세기말의 경제위기의 원인론으로, 정부의 과다개입론과 과소개입론의 대립이 있다. 본고는 이 네 쟁점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다. 본고는 내재적 발전론자의 많은 연구성과를 들어, 조선사회정체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동시에 내재적 발전론이 주어진 일정한 역사적 사명을 다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내재적 발전론의 연장선 상에서 식민지 시기를 단순한 수탈의 시기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고는 제국주의가 없었더라도 근대 문명의 확산은 장기적으로 관찰되었을 것으로 보고 또한 근대로의 진입 이후의 성장의 가속화는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므로, 식민지 시기의 개발의 측면을 '우상시' 할 필요는 없음도 지적한다. 식민지 시기의 성과를 전후의 고도성장에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 본고는 부정적이다. 이는 전후 고도성장의 원인이 주로 인적자본 축적에 있다고 보고, 식민지 시기에 인적자본의 축적이 미미했다는 사실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본고는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의 두 축을 국가주도성과 대외지향성으로 보고, 전자에서 정부개입이, 후자에서 국제적 시장주의가 수용되었다는 개입주의에 가까운 절충적 입장을 취한다. 마지막으로, 세기말의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내부요인만으로 경제위기의 직접적 발생을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그 직접적 계기가 외부충격과 정부실책에서 있으나, 위기의 직접적 계기보다는 위기로 향해가는 내부적 메카니즘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박정희 식 고동성장 체제의 한계가 무엇이었는가를 밝힌다.

1. 序 論

새 천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지난 천년의 韓國史를 되돌아 보면, 여러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지난 천년을 돌이켜 보면, 한국은 中世시대에 상당히 발전된 문명을 달성하였고,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대외적으로 개방되기 이전에도 어느정도의 근대지향적 변화를 경험한 바도 있으나, 20세기 초에 植民地로 전락하였다가 1945년에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 남·북으로 분단되었다.⁽¹⁾ 남한은 1960년대부터 고도성장을 달성하여 新興工業國 내지 중진자본주의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세기말에 경제위기를 당하였다. 신생독립국으

로서 선진국에 대한 추격에 성공하였다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경제위기를 당한, 한국의 20세기 후반의 경험은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본고는 20세기 후반 한국의 경제발전을 지난 천년간의 변화 위에서 고찰하였을 때, 그 원인이 더욱 정확히 파악되고 그 의의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는 입장에서 서 있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할 때, 과거 천년 동안의 韓國經濟發展史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중요한 쟁점이 파악된다. 첫째, 한국 중세의 경제는 정체되어 있어서 근대로 이행할 전망을 결여하였다고 보는 朝鮮社會停滯論과, 이와는 반대로 資本主義萌芽가 출현하고 자력으로 근대로 발전할 전망을 가졌으나 帝國主義의 침략에 의해 부정당하였다고 보는 內在的 發展論의 대립이 있다. 둘째, 식민지배를 경제적 수탈과 왜곡의 과정으로 보는 植民地收奪論과, 수탈뿐만 아니라 개발이라는 면이 있어서 해방 후 고도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고 보는 植民地工業化論의 대립이 있다. 셋째, 박정희 시대의 고도 성장에 대한 평가의 문제에 있어, 이를 시장주의적 경제발전 전략의 공으로 보는 주류경제학적 입장과 정부의 개입주의적 전략의 성과로 보는 비주류경제학적 입장의 대립이 있다. 넷째, 고도성장 끝에 온 1987년의 외환 경제위기의 원인론으로, 정부의 過少介入論과 선부른 자유화가 위기를 불렀다는 過少介入論의 대립이 있다.

사실 위의 네 쟁점에 대하여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가령, 식민주의 사관이라 할 수 있는 조선사회정체론을 비판하고 제기된 내재적 발전론을 취하면, 식민지기에 대해서도 식민통치의 부정적 측면을 증시하는 수탈론의 입장에 서기 쉬운데, 근대경제의 발전 동인을 연속적으로 보자는 취지는 식민지공업화론이 더 강하게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식민지공업화론을 취하여 식민지기에 이룩된 경제적 성과와 기반 구축을 강조하다 보면, 한국경제가 해방 후부터 고도성장이 시작되는 1960년 이전까지의 15년 동안 왜 활력이 약하였고 고도성장을 개시하는 시점에서 最貧國에 머물렀던가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또한 전후의 경제성장을 정부개입보다는 시장주의적 전략의 성과로 보는 주류경제학적 입장은, 1997년의 위기의 원인이 정부의 과다개입의 결과라고 보는데, 이는 정부개입의 정도가 1990년대에 오히려 과거보다 증가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면에서 좀 이상하다. 한편 비주류적 국가주의적 입장은 많은 부작용을 낳은 개발독재를 미화하는 부수적 효과를 낳고 있으며, 나아가서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관료와 거기서 나오는 경제정책이 대자본의

(1) 각 시대별 호칭을 존중한다면, 고려시대에는 고려, 조선시대에는 조선, 대한제국기에는 한국, 식민지기에는 한국, 분단체제 아래에는 북부를 조선, 남부를 한국이라 불러야 하지만, 용어의 번잡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한국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영향력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정부주도의 경제운용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불분명하다.

본고는 이렇게 중요하고 또한 어려운 문제인 지난 천년의 한국경제사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문제 제기 차원에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를 일관된 시각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첫 번째 시도이다. 이런 시각에서 한국경제사의 장기적 과정을 다룬 연구는 본격화되지 않았다. 그래도 비슷한 연구물이 고대 이래의 한국경제사에 대해 통사적 접근을 하고 있는 이현창(1999)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현창(1999), 이근(2000), Lee(1993)의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위에서 제기한 네 가지 爭點에 대해, 과도한 단순화와 편향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中世, 植民地期, 高度成長期, 경제위기 국면이라는 지난 천년간의 네 시기를 일관된 시각에서 이해하고자 할 때, 특정 시기의 경제발전을 결정하는 기본 요소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첫째, 초기조건 혹은 每期 초기의 발전 수준, 둘째, 국제적 환경 내지 외부적 계기, 셋째, 주체적 대응 전략이라는 세 요소라고 보고자 한다. 그 前期의 역사적 축적물로서의 매기의 초기 조건 즉, 지난 천년의 초기, 식민지 초기, 고도성장을 개시하는 시점이라는 각 국면의 초기 조건은 각각 달랐고, 그에 따라 주체적 대응 역량이 달라지고 대응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한국중세사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컸고, 식민지기는 일본의 압도적 영향권에 있었고, 고도성장기 경제위기의 요인으로도 국제적 조건이 중요하였다. 그런데 식민지기의 변화도 일본이라는 외부 세력의 힘에만 기인한 것은 아니었고 내부적 여건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초기 조건과 국제적 환경을 잘 활용하는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마련인데, 고도성장기는 그런 예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국가의 자율성과 능력의 쇠퇴라는 초기 조건의 변화, 그리고 개방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략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였던 것이 경제위기의 원인이자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각 국면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에 유의하면서, 네 쟁점을 일관된 시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2. 朝鮮社會停滯論과 內在的 發展論의 對立 및 先行條件充足 假說

한국에서 근대적 역사학이 시작되고 경제사가 분화된 것은 식민지배 아래서였다. 일제시대 한국 전근대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은 朝鮮社會停滯論이었다. 이 사론을 처음 제창한 福田德三(1907)은 한국 중세에 토지소유가 主君과 家臣간의 位階的 편성=렌제를 결여하고 행정제도가 郡縣制度에 의한 중앙집권제라는 점에서 봉건적인 형식이 결여되었고, 그 때

문에 정제하였다고 보았다. 식민지기 사학을 주도한 일본인 관학자들은 러일전쟁 직후 짧은 한국 방문기간의 견문과 당시 한국에 체류하던 일본인의 의견을 토대로 정립된 이 주장을 식민지배가 완료될 때까지, 다소 변형하기는 했지만 자명한 전제로 받아들였다. 경제적인 정제론은 朱子學에만 집착하는 '사상적 고착성,' '黨爭亡國論,' 국외적 조건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아왔다는 '他律性論'과 상통하였다.

자세히 관찰하면 조선사회정제론은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심은 조선시대에 경제가 정제하였다는 것이고, 그 원인으로서 경제발전 단계론에서 한국의 특수성이 거론되었고, 강화도조약 이후 근대문명의 충격에 한국이 대응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식민지기에는 조선시대의 경제가 자명한 전제로 받아들여지고, 발전단계론 상 조선시대의 특질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졌다. 한국이 노예제 내지 봉건제를 결여하여 정제하였다는 통설에 대항하여 白南雲(1933)은 한국사에도 세계사의 발전법칙이 예외없이 관철된다는 사론을 전개하였다. 그는 씨족공산제사회가 삼국시대에 노예제사회로 전환하며 통일신라말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사회를 아시아적 봉건제라고 규정하였다. 아시아적 봉건사회는 토지국유제를 물질적 기초로 삼고 封土의 授受를 통한 위계적 편성을 결여한 중앙집권적 관료국가라는 점에서 아시아적 특성을 가지면서도, 봉건적인 대토지소유와, 노동수단을 소유하지만 토지에 긴박된 채로 잉여를 수탈당하는 農奴의 소농경영간의 對蹠的 구성이라는 봉건제의 일반적 기초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8·15해방 후에 민족적 허무주의의 극복과 자주적 국민국가의 건설을 위한 민족적 역량의 결집이라는 역사적 과제는 식민주의사관의 극복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역사 연구가 진행된 결과, 조선사회정제론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던 점이 여러 측면에서 지적되고, 50년대 후반부터 조선사회를 발전적으로 보려는 움직임이 대두하였다. 경제사 연구에서 앞서간 북한에서 1956년 열린 '조선에서의 부르주아 형성에 관한 토론회'는 17세기 후반 이후 資本主義萌芽(資本·賃勞動관계의 형성을 의미한다)가 自生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1963년 간행된 『조선통사』(제2판)는 18세기 이후 계급모순의 성장, 실학사상의 형성, 자본주의맹아의 발생으로 인하여 봉건제가 위기에 처하였다고 보았다. 남한의 학계에서는 1960년대 이래 조선후기 내재적 발전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어 사상사적으로는 實學, 사회사적으로는 사회신분제의 변동, 경제사적으로 토지사유제도와 자본주의 맹아론의 연구가 심화되었다.

내재적 발전론으로 포괄할 수 있는 한국사학의 조류 아래 축적된 방대한 연구의 성과를 경제사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통일신라시대부터 공유지와 구분되는 私有地가 존재하였음이 실증됨으로써, 土地國有論이 부정되었다. 토지국유론의 논

거가 된 王土思想은 실체를 결여한 단순한 관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둘째, 봉건제를 법제적인 개념인 렌제로 보지 말고 대토지소유와 분산적 소경영의 결합형태로 보아 한국 중세기에 봉건제의 존재를 인정하는 백남운의 견해가 계승되었다. 백남운은 토지국유제를 물질 기초로 하는 봉건제를 주장하였음에 반하여, 1960년대 이래에는 토지사유제에 기초한 봉건제가 통설로 되었다. 노예제 사회의 존재 여부를 둘러싸고 북한학계에서는 1960년대 초에 활발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리스나 로마에서 발달한 노예제대경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고조선·부여·진국은 정복자집단이 피정복자집단을 노예 상태로 지배하였다는 점에서 노예제사회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논쟁의 결말을 보았다. 1930년대 스탈린 사학은 인류사가, 다소간 시간의 차이를 가지지만, 노예제→봉건제→자본제로 발전하여간다는 이른바 세계사의 발전법칙을 정립하였는데, 이러한 史論이 직·간접적으로 한국사 연구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셋째, 조선후기에 상품화폐경제가 성장하고 자본주의 맹아가 출현하였음이 실증됨에 따라, 조선사회는 정제한 것이 아니라 근대로의 내재적인 발전추세를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논거로서, 조선후기에 화폐경제가 성장하고 지방에서는 場市가 발달하고 서울에서는 市廛의 영업독점권이 해체되면서 私商이 성장하였으며, 농민 층분해가 진행되면서 富農層이 성장하고, 관청수공업이 민영화하고 일부의 광공업에서는 공장제수공업이 출현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거론되었다. 넷째, 강화도조약 이후에는 실학사상과 관련을 가지면서 개화사상이 형성되고 개화정책이 추진되고 이전 발전의 기반 위에서 상품생산이 진전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內在的 發展論이 아직도 한국사학의 主流이지만, 1970년대부터 그 연구 방법과 실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가 일각에서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서양사학자 梁秉祐(1971)는 戰士階級이라는 봉건제도의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여, 封土의 授受를 통한 분권적인 정치구조가 출현하지 않았던 점에서 봉건제라 보는 데에 반대하였다. 安秉(1975)는 자본주의 맹아론이 근대적 내지 근대지향적 요소만을 추출하여 부각하는 ‘浮彫的方法’이라고 비판하고 전근대적 요소도 포괄하는 ‘構造的 把握’을 제창했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사회가 공동체적 토지소유의 차이로 인하여 유럽보다 완만하게 발전하였다고 보았다. 그 이래 한국의 경제사학계와 미국의 한국사학계는 자본주의 맹아론이 발전적 요소를 과대평가하였다는 안병태의 인식에 동조하게 되고, 한국이 내재적인 힘으로 근대화를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에 회의를 표명하게 되었다. 그중 李榮薰(2000)은 내재적 발전론의 비판에 그치지 않고 조선전기의 國家的 農奴制가 변하여 17세기 후반부터 小農社會가 성립하였다는 시대구분론을 최근 제시하였다.

최근 이헌창(1999)은 한국 중세의 구조와 변화를 이해하는 체계적인 사론을 정립하고

자 시도하였다. 그는 논란의 소지가 큰 세계사의 발전법칙을 따르기 위해 봉건제의 개념을 확대하여 한국사에 무리하게 적용하여 공통성을 구태여 강조할 필요가 없으며, 차라리 우리 나라 고대와 중세의 특징적인 사회구조와 그 속에 관철되는 발전추세를 확인하고 그것을 유럽 등 여타 지역의 역사 전개와 비교해보는 작업이 역사연구의 구체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한국 전통사회를 소농경영이 발달한 농경사회로서 렌제를 지배질서의 편성원리로 삼은 서유럽의 봉건제라고 보지 않고, 集權국가라는 상부구조를 가진 중세사회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자고 주장한다. 두 유형의 사회의 分岐는 집권적 행정력의 발달 정도와 렌제와 같은 主從關係의 전통의 強弱 등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이헌창(1999)은 조선시대에 농업생산력이 발전하여 인구가 증가하고 사적 토지소유가 진전하며, 조선후기에 노비제가 해체하고 금속화폐가 널리 보급되고 효율적인 시장망이 형성되어 농촌경제를 포섭하고 있었다는 발전적 요소를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 점에서 내재적 발전론의 연구성과를 계승하면서도 그것이 '부조적 방법'으로서 발전적 양상을 과대평가하였다는 비판에 동의하였다. 또한 내재적 발전론이 세계사적 발전법칙이라는 형이상학적 명제에 의거하고, 발전의 動因을 내부에서 구하여 문명간 교류와 기술의 전파라는 외부적 계기를 소홀하게 다루게 된다는 방법론적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는 강화도조약 전에 자생적 근대화의 가능성이 있었던가라는 물음을 근대로의 이행을 위한 선행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었던가라는 방향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하였다.⁽²⁾ 정체론적 시각에서는 선행조건이 미비된 측면만, 내재적 발전론에서는 그것이 구비된 측면만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충족된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근대문명의 충격에 대한 대응의 역량을 어떻게 규정하였던가를 고찰하는 것이 생산적인 작업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근대로의 이행을 보증해줄 선행조건에 대한 대답은 아직 제시되지 못한 실정이지만, 이헌창(1999)은 경제사학계의 축적된 연구성과를 참조하여 선행조건으로서 먼저 합리적 경제동기의 추구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사회제도와 사상이 소멸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나아가 근대적 산업화의 시동을 걸 수 있는 경제적 축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사적 소유제도가 진전하고 노동력의 처분을 제약하는 노비제가 미미한 정도로 축소되었고 경제생활이 시장·화폐와 관련을 확대하였던 점 등으로 보건대, 근대적 제도가 도입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2) 근대적 성장의 先行條件은 로스토우(W.W. Rostow(1960))와 거셴크론(A. Gerschenkron(1966))이 논의한 바 있다.

일정 정도 조성되었다고 그는 평가하였다. 반면에 상인자본의 발전도, 기업가 역량의 형성 정도, 상품생산의 수준, 과학기술의 기반 등으로 보건대, 개항전에 근대적 산업화의 시동이 걸리기에는 경제적 축적이 크게 미비하였다고 인식하였다. 그렇더라도 농업생산기반을 어느 정도 갖추었고 근면성과 교육열 및 초보적 시장경험을 가진 인력이 풍부하였고 시장과 상인자본 및 상품생산이 완만하지만 꾸준히 성장하였던 것으로 보건대, 적절한 계기가 주어진다면 後發産業化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마저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헌창(1999)은 한국의 19세기는 경제적 순환 국면의 가운데 수축기이며, 또한 전통적 경제성장의 한계에 거의 접어들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19세기 전반에 인구밀도는 1 km² 당 70명을 넘어 전통적 단계에서는 거의 한계에 도달하였고, 그 때문에 인민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그리고 정기시의 밀도나 도시화율이 증가추세를 가지지 못하였다. 그런 점에서 19세기에 조선사회가 더 높은 차원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대적 생산력, 중화질서를 벗어난 다변화된 국제관계,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변혁이 요청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문호개방을 통한 근대세계로의 편입은 조선사회의 근대적 변혁을 위한 중요한 자극이었다. 조선후기 중화질서에 안주하여 선진적인 유럽문명의 자극을 배제한 것이 국제무역과 기술 및 사상의 진전을 제약하였으므로, 구미국가와의 무역과 교류는 전통적 성장의 애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필수적인 자극이었다.

그러면 한국은 왜 식민지화되었던가. 이 물음에 관해서는 최근까지도 한국이 자주적으로 근대화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견해와 근대화로 나아가는 것을 일본이 막아버렸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헌창(1999)이 제시한 이에 대한 절충적인 견해를 소개한다. 강화도조약 직전 한국은 근대화 선행조건인 충족도가 낮아서 유럽의 후진지역이나 중국·일본보다 후진적이었다. 거센크론(1966)에 의하면, 후진국은 충족되지 못한 선행조건인 대체물을 만들고 後發性的의 이점을 활용하여 급속한 공업화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근대화가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지만, 후진성이 심각한 조선에게 이는 벽찬 도전이었다. 강화도조약 이후 한국에서는 신속히 개화사상이 출현하고 富國強兵을 위한 근대화 정책이 추진되었고, 근대화정책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전하는 추세였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민간의 근대적 경영도 미미하나마 확산되고 성장하는 추세였다. 이러한 근대화 노력은 러일전쟁의 시점에 일본의 보호국화 책동을 막을 만큼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결국 초기조건으로서의 후진성과 가혹한 외압이 결합하여 조선은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특히 조선에 대한 외압은 가혹한 편이었다. 즉, 국제조약의 불평등성은 일본보다 훨씬 가혹하고 중국보다도 덜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자주적 근대화에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았다. 처음에는 근대적 변혁에 유리하게 작용하던 대중·대일관계가 개항 후 6년

이 지난 임오군란을 기점으로 불리하게 바뀌었고, 개항된 지 30년이 안되어 일본은 조선의 식민지화에 본격 착수하였다. 이 시기 근대화에 유효한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한 것은 후진성에 따른 주체적 역량의 부족과 외세의 간섭에 기인하였다.

3. 植民地收奪論과 植民地工業化論의 對立 및 折衷論

식민지화 이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식민지기, 나아가 해방 후를 바라보는 시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천년간 네 쟁점을 일관되게 보려는 시도가 필요하고 가능할 수 있다.

朝鮮社會停滯論者는 자율적으로 자본주의로 전환할 수 없는 정체된 조선사회에 대하여 일본과 같은 나라가 자본주의 문명을 베풀어야 한다는 제국주의지배를 합리화하는 논리를 도출하였다. 시가타 히로시〔四方博(1933)〕는 “開港 당시 조선에는 자본의 축적도 없고 기업적 정신에 충만한 계급도 없고 대규모생산을 지탱할 기계와 기술도 없었”으므로, “조선의 자본주의는 그 출발점에서도 또 그 생성과정에서도 외국의 자본과 기술능력에 의뢰할 따름이었다”고 보았다.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 등은 1930년대 급속한 공업화를 ‘朝鮮産業革命’이라 부르고, 그것을 추진한 주된 동력을 일본자본과 총독부의 지원으로 보았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식민지유산의 청산이란 과제를 제기함에 따라, 일제시대를 帝國主義收奪史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土地調査事業의 연구는 국유지의 창출을 위한 土地收奪의 과정에 관심의 초점을 두게 되고, 産米増殖計劃은 미곡 수탈을 위한 農政으로서 이해되고, 軍需工業化는 자원과 노동력의 약탈을 낳았다는 점에서 중시되었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소극적인 면에서 제국주의의 비판과 식민사관의 극복에 기여하였다. 그런데 제국주의의 수탈이란 정체된 사회에 대한 문명화작용의 부산물로 이해할 수도 있으므로, 조선사회정체론을 극복하지 못하고서 제국주의의 文明施惠論을 根底에서 극복할 수는 없다. 게다가 한국이 수동적으로 수탈만 당하여왔다고 파악하는 역사관은 한민족을 조선사 전개的主體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것이다.

內在的 發展論은 조선후기에서 나타난 資本主義萌芽 등으로 대변되는 내재적 발전과정 이 제국주의의 침략과 지배로 인하여 歪曲·壓殺당하였다는 시각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시각을 실증연구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연구자인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1977)〕는 “조선에서의 자본주의의 내재적인 형성과 전개를 조선근대사의 총과정을 관통하고 있는 한울의 붉은 실로서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개항기 외압에 대한 土着綿業의 대응과 일제하 평양의 조선인메리야스공업의 성장·왜곡·좌절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역사관은 한

민족을 조선사의 주체로서 설정하면서 식민지 지배의 왜곡작용을 적극적으로 비판할 수 있게 하였다.

역사는 현대사적 관점에 규정받기 마련이다. 8·15 이후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파탄, 원조에 의존하지 않고는 지탱할 수 없는 경제,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과 기술의 격심한 隘路에 직면하던 역사가들은 그러한 현실의 역사적 전제가 되는 제국주의 지배의 약탈성과 왜곡성을 중시하였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관계가 발달하고 노자대립이 첨예화되고 노동운동이 고양됨에 따라, 1980년대 중엽부터 진보적인 소장학자를 중심으로 일제시대를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전개의 초기 국면으로서 위치지우는 시각이 나타났다. 李炳天(1975)은 “1930년대의 이같은 자본주의발전에 대한 이해는 … ‘왜곡’되고 ‘파행’적인 식민지 유제를 낳았다는 관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 한국자본주의의 역사, 그 내적 모순의 전개과정과의 연관이라는, 한국근현대사를 자본주의 역사의 관점에서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60년대 이래 급속한 공업화와 고도성장을 실현한 한국이 新興工業經濟(NIEs)로 부상함에 따라, 식민지기에 전후 성장의 그 역사적 전제조건이 마련되었다는 주장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즉 식민지기에 일본제국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收奪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의 구축, 산업생산 기반의 강화, 교육·위생의 개선 등의 開發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론은 한국의 식민지 경험이 후에 신흥공업경제로 부상하는 데에 기반이 되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식민통치를 위한 효율적인 관료제와 개발 지향적이고 추진력을 가진 朝鮮總督府는 1960년대 이래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강력한 국가를 성립시킨 역사적 유산으로 간주되고 있다(Myer and Peattie(1984)). 에커트는 1921년·1936년·1938년 세 차례 열린 産業調査會를 정부·기업간의 協力的 資本主義의 업적으로서 높이 평가하였다. 나아가 그는 전통사회가 산업자본주의의 근간을 마련할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자본주의의 성장에 대한 전통시대의 유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은 일제시대의 문명시혜론으로 접근한다(Eckert(1991)).

식민지기의 경제적 변화를 자본주의화 과정으로 인식하면서도 한국사회의 내재적 발전의 연장선 상에서 이해하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어서 주목된다. 나카무라 사토루(中村哲(1987))는 한국이 1960년대 이래 中進資本主義國으로 발전하게 된 역사적 전제로서 “식민지화 이전의 內的 發展과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지배가 결합되어 본원적 축적이 급속히 진행되고, 그 위에 1930년대부터 일본 본국으로부터 진출하여 온 일본독점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植民地資本主義社會로 되었”던 것을 들고 있다.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1991))는 토지조사사업이 한국사회내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온 토지제도의 개혁을 계

승한 근대적 토지변혁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함으로써, 식민지화 이전의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기의 근대화론을 接續시키고자 시도하였다. 종래 토지조사사업은 제국주의적 수탈을 가장 확연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미야지마의 이러한 해석은 한국사연구자에 의하여 식민지정책을 근대화정책으로 동일시하는 '식민지사관적 해석으로의 퇴행', 또는 '내재적 발전론을 가장한 또 하나의 식민주의 역사인식'으로 규정되기도 하였다.

최근 安秉直(1995)은 일제 하의 수탈과 개발론, 그 연장선 상에서 해방 후의 중진자본주의론을 국내 학계에 적극 도입할 것을 주창하였다. 그는 제국주의 지배를 '收奪과 低開發化'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종래의 시각이 세계자본주의체제 하에서 고도성장을 달성한 현단계에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였다. 그에 대신할 역사관으로서 '收奪과 開發'이라는 구도에 대하여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개발이란 개발을 통한 수탈이라는 의미에서의 제국주의측의 개발, 그리고 조선인을 근대적 주체로 변모시킨다는 自己開發의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이처럼 일제시대를 보는 시각의 현저한 편차를 줄이기 위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 우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사회정체론의 오류와 내재적 발전론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이러한 사론에 입각하여 일제시대를 정당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내재적 발전론을 토대로 하는 근대사 연구는 자본주의맹아의 발전을 과대평가함으로써 반식민지화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주체적 조건의 성찰을 소홀하게 하며, 식민지 하에서 진행된 자본주의화 과정의 역사적 의의를 과소평가하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문명이 확산되는 특수한 한 양식이고 근대문명의 변혁적 힘이 식민지에도 전달된다는 점에서, 식민지 지배 하에서의 '開發'을 정당하게 위치지워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식민지화 이전의 유산이 식민화 이후 경제성장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식민지배 아래 왜곡이 있었던 점에서, 식민지근대화론 내지 개발론은 한계를 가지며 상대적으로 내재적 발전론으로부터 계승할 논점이 있다. 장기적인 시야로 본다면, 근대문명의 확산은 제국주의 지배를 통하지 않더라도 관철되었을 터이므로, 제국주의를 통하여 '개발'이 되는가 아닌가라기보다 반식민지화와 식민지 지배를 통한 근대문명의 확산이라는 양식의 특질이 무엇인가가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에커트의 주장대로 조선전통사회가 산업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룰 기술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화도조약 후에 자력적으로 근대적 산업기술을 흡수할 전망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강화도조약 이전 조선시대에는 인구성장률이 연평균 0.25% 정도이고 1인당 생산이 추

세적 변화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부터 추론되는 바와 같이, 전통적 경제성장의 단계에 머물렀다. 식민지기에는 조선내 총생산이 연평균 3% 이상, 인구가 1%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서, 쿠즈네츠(Kuznets(1973))가 상정한 근대경제성장의 요건에 부합한다. 그런데 쿠즈네츠는 식민지적 상황을 고찰하지 않았고 경제성장률을 근대경제성장의 충분 조건으로 보지는 않았으므로, 성장률이 높다는 것만으로 일제시대초에 근대경제성장에 진입했다고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식민지기의 경제성장은 제국주의경제권에 편입되어 이루어져 산업구조가 현저히 비자립적이었다. 높아진 성장률에 대응하여 물적 설비는 크게 확장되었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조선인의 역량, 곧 人的 資本은 그에 상응하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일본인이 근대적 기업과 그에 고용된 기술·관리인력을 거의 장악한 반면, 한국인 자본·기술력의 성장은 제약을 받았다. 그런 점에서 조선민족으로 본다면 自己充足的 動力을 가지지 못하는 경제 성장이었다. 또한 조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그 생활수준은 향상되지 못하였다. 그런 점에서 식민지기에 참된 의미의 근대경제성장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1960년대 이후 개시되었던 것이다.

식민지기에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공업화가 진전하고 성장률이 높아진 데에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자본·기술·경영력, 그리고 식민지정부의 추진력이 크게 기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요소는 식민지화 전 한국사회에서 부족하거나 결핍된, 근대경제성장을 위한 선행조건이었다. 그런데 식민지기 경제성장의 동인을 일본의 힘으로만 돌려서는 곤란하다. 근대세계의 규정성도 들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근대로의 진입은 근본적인 제도 변혁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초래하는데, 식민지기가 근대사의 초기국면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변화가 현저하였던 것이다.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식민지화 이전 한국사회의 성취가 이러한 변화와 성장을 뒷받침한 점을 인식할 수 있다. 전통시대 조선의 오랜 집권통치경험, 높은 문화수준, 일정한 경제적 변화, 개항후 근대문명의 수용 노력이 일제시대의 경제적 변화를 원활히 하고 그 성장을 뒷받침하였다. 조선시대 私的 土地所有制의 진전은 토지조사사업의 신속하고 비교적 원활한 진행을 가능케 하였고, 集約的 小農經營의 발전은 산미증식계획기에 일본식의 보다 집약적인 농법을 원활히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개화사상이 심화되면서 민간에 확산되고 근대화정책으로 근대문명에 접촉하고 그 이점을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일제에 의한 근대문명의 이식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을 것이다. 전통시대에 이미 인구밀도가 높았고 노동력의 처분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일본자본이 노동력의 확보에 애로를 크게 느끼지는 않았다. 식민지화 이전에 발현된 높은 교육열은 일제시대 교육의 확대

를 뒷받침하고 조선인 인적 자본의 성장을 낳은 근원적인 요인이었다.

해방 후는 식민지화될 시점에 비해 경제나 국가기구 등의 면에서 훨씬 근대화되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식민지기에 고도성장의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겠지만, 식민지배를 받지 않았더라도 근대화는 진행되었을 것이란 점을 고려해보면, 식민지 경험이 고도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고 보고 싶지 않다. 식민지기에 근대적 산업설비가 상당히 구축되었지만, 해방·분단·전쟁을 통하여 크게 유실되었다. 근대적 산업설비의 부족으로 한국이 1950년대에 最貧國에 머물렀고 경제성장정책의 수행에 애로를 겪었다. 고도성장을 위한 중요한 내부 자산으로서 교육을 받은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게 된 것은 일본의 영향이 아니라 한국 내부의 유산이었다. 경제개발전략을 강력히 추진하는 국가기구가 형성된 데에는 식민지유산이 상당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집권국가체제를 발전시키고 높은 수준으로 정치적 통합을 이루어왔던 전통시대의 유산을 무시해서는 곤란하다.

4. 東아시아 奇蹟에 대한 市場主義와 國家主義의 對立

2차대전 후에 제국주의로부터의 독립을 달성한 제3세계의 국가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 독립과 선진공업국을 향한 추격을 어떤 식으로 수행할 것인가였다. 일부 제3세계 국가들은 사회주의의 길을, 또 일부 제3세계 국가들은 자본주의적인 길을 택하였다. 보다 다수의 제3세계의 국가들은 자본주의적인 길을 택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3세계의 공업화가 부진하고 특히 1970년대에 들어서 외채위기가 등장하면서 제3세계의 경제발전 가능성에 대한 비판론이 팽배해졌다. 이러한 비판론은 소위 從屬理論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사조를 낳아서 제3세계 국가들은 세계자본주의 시장권에 참여할수록 선진자본주의에게 자국의 경제 잉여를 유출당함으로써 자국내의 자생적인 공업화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렇게 1970, 1980년대를 풍미한 종속이론의 반례가 바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대표되는 동아시아의 기적이다. 이 아시아 4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제3세계권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불가능하다는 비판론에 대한 반례였으며, 이로부터 소위 자본주의화에 있어서 선진국의 경험과는 다른 중진국 자본주의의 길이라는 논의도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동아시아의 기적은 국가를 보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시각에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국가라는 것은 지배계급에 봉사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선진제국주의에 의해서 조종되는 지배계급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파악하였는데, 이런 국가를 가지고 어떻게 경제기적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동아시아의

기적은 세계사적으로 제3세계에서도 선진공업국으로 도약이 가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종속이론에 의해 대표되었고, 제3세계가 가졌던 박탈감을 표방하는 제3세계 이데올로기의 퇴조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동아시아 기적의 원인에 대한 설명과 평가의 문제에 있어, 이를 市場主義的 經濟發展 戰略의 공으로 보는 주류경제학적 입장과 정부의 介入主義的 戰略의 성과로 보는 비주류경제학적 입장의 대립이 있다[World Bank(1993), Balassa(1988), Amsden(1989), Chang(1994)]. 이 논쟁을 한국에 관해 촉발시킨 대표적 연구는 Amsden(1989)이다. 여기서 그녀는 한국과 같이 전후에 농업국가로 출발하여 공업화를 달성하는 것을 後發工業化(late industrialization)라고 규정하고, 후발공업화와 그 이전의 선진국의 공업화 과정과의 차이를 밝히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녀는 동아시아의 후발공업화를 각각 발명과 革新에 의해 추동된 선진국의 제1, 제2 산업혁명과 대비하여 '學習(learning)'에 의해 추동되었다고 보았다.⁽³⁾ 이러한 문제 제기는 주류경제학에도 영향을 미쳐 소위 內生的 成長理論으로 대표되는 성장론의 부활을 가져 왔다.

한국에서의 급속한 후발공업화의 원인에 대해서 Amsden(1989)은 시장주의적 접근과 제도주의적 접근을 대비한다. 즉, 그녀는 우선 상품이 거래되는 '장소'로서의 시장과 자원배분을 시장에 의존한다는 시장기구 혹은 시장주의를 구분한 후, 시장원리를 거부했다고 해서 공업화가 지연되는 것도 아니며 시장원리를 채택했다고 해서 바로 성공적 공업화가 보장되는 것도 아님을 지적하고, 그 한 예로서 식민지에서는 대부분 자유방임적 자유무역주의가 채택되었음을 들고 있다. 즉, 그동안 저개발 상황에 있던 국가에서 급격한 공업화가 일어나곤 하는데 그 이전까지의 '지연'은 기본적으로 공업화 과정을 주도할 강력

(3) Amsden(1990)은 영국주도의 제1차 산업혁명(1760-1830)은 기본적으로 발명(invention)에 의해 추동되었고, 정부의 역할은 自由放任(laissez-fairs)주의였다고 본다. 독일, 미국 주도의 제2차 산업혁명의 추동력은 革新(innovation)이었으며, 이 경우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후발 산업을 보호하는 幼稚産業保護論(infant industry argument)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정부의 개입주의적 정책은 단순히 전후 개도국에서만 현상은 아니며, 이미 선진국의 과거 공업화 과정에서도 있었음을 강조한다. 또한 엠스덴은 선진국과 대비해 볼 때, 후발공업화의 추동력은 발명도 혁신도 아닌 학습(learning)이었으며, 정부의 역할은 유치산업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보조금(지대)을 통한 적극적인 유인(incentive) 제공이었음을 강조한다. 그 차이는 전후 개도국의 상황이 더욱 열악하여 단순히 보호무역주의 정책만으로는 후발기업들이 선진국기업들과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본다. 후발공업화의 또 하나의 차별적 특징은 새로운 제품의 발명이나 개발이 아니라 단순히 저임금의 양질 노동력 요소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었다는 사실이다. 즉 과거 산업혁명 과정에서 저임금은 기계화를 늦추는 오히려 '방해요소'로까지 인식되었으나 후발공업화에서는 저임금이 주요 경쟁원천으로 작동했던 점을 부각시킨다.

한 국가의 부재가 그 원인이었으며, 마찬가지로 후발공업화라는 도약(take-off)도 국가의 주도에 의해서만 가능했음을 지적한다.

즉 후발공업화는 기본적으로 硬性國家를 그 핵심으로 하는 여러 제도의 결합으로써 설명될 수 있으며, 이 관련제도들이 어떻게 운영되는가가 성장의 성과 차이를 낳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라는 제도의 필요성, 구체적으로 국가의 시장에의 개입과 그에 따르는 複數價格(multiple price)의 유지 및 의도적 價格歪曲(price distortion)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도출해내었다.

그 첫 번째 논리는 투자자극을 위해서는 이자율이 낮아야 되고, 반면에 저축증대를 위해서는 이자율이 높아야 한다는 모순과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논리는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자국화폐가 저평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그 반대로 공업화에 필요한 기계설비 수입을 위해서는 자국화폐가 고평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사이의 모순이다. 세 번째 논리는 외국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의 필요성과 자국의 수입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자유무역주의의 필요성 사이의 모순이다. 네 번째 논리는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자본도피 방지, 장기투자 자극)이 필요하다는 안정론과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속적 성장 기조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성장론(인플레이 감수론) 사이의 긴장이다.

엠스텐은 이런 네 가지 모순들에 직면해서 공업화 과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 국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고 설명했다. 가령, 첫 번째 논리인 이자율수준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자유방임을 택하면 기본적으로 자본이 희소한 개도국 대부분에서는 이자율은 높게 유지될 것이며, 그렇게되면 투자는 활발하지 않을 것이고,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저축증대 효과도 별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저소득국가이고 시장규모가 작은 나라의 경우, 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외국자본이 무조건 유입되는 것도 아니다. 이 경우 자유방임 정책은 현재의 정체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효과밖에 없을 것이다. 이때 인위적으로 이자율을 낮게 하고 자국의 초과수요에 대해서는 정부에 의한 信用割當으로 처리하여 기업을 먼저 육성하고 그 과실로써 국민에게 일자리와 소득향상이 돌아가는 메카니즘을 작동하는 것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환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중환율제를 시행하거나 환율에 대한 중앙집중적 통제를 통해 수출증대 효과와 수입억제 효과를 동시에 추구해 나가는 것도 국가가 할 수 있는 시장개입의 예가 되는 것이다. 엠스텐은 바로 이러한 국가의 개입이 후발공업화의 주요 특성이라고 보았다.⁽⁴⁾

(4) 단, 다른 후발공업국가에 비해서, 한국의 특이성은 국가에 의한 민간기업에 대한 規律(discipline)이 특별히 높았다고 엠스텐은 강조하고 있다. 즉 이러한 고강도의 규율이 있었기

엠스텐과 비슷하게 비주류적 입장에 서있는 영국의 Fine(1992)은 동아시아 기적에 관한 문헌들을 비판적으로 개괄하면서 이들을 크게 Agencies(주체적 조건)에 설명의 중심을 두는 문헌과 linkages(정책효과)에 중점을 두는 문헌들로 나눈 적이 있다. 주체적 조건이란 바로 국가기구의 성격과 능력, 階級構造 등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크게 보아 '初期條件(initial conditions)'이라고 볼 수 있고, 정책효과란 동아시아 기적의 원인이 정책의 전략적 선택(가령 수출주도 대 수입대체)의 차이에 있음을 강조하는 견해라고 볼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크게 보아 주류경제학 입장의 학자들은 정책의 차이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비주류학자들은 초기조건의 차이를 중시하는 경향이 보인다는 점이다.

이미 위기를 겪은 현시점에서 한국의 경제기적의 원천을, 적절한 對外指向的 경제정책의 선택으로 보는 시각(시장주의적 접근)과 경제정책보다는 경제행위집단의 특성 또는 국가 역할이나 계급구조 등의 초기조건이 중요하다고 보는 시각(국가주의적 접근)에 대한 사후적 평가가 필요하다. 올바른 경제정책의 선택을 강조하는 입장은 초기에 對內指向的인 수입대체정책을 택한 라틴아메리카의 실패와 대외지향적인 수출주도 전략을 택한 동아시아 성장을 대비해서, 대외지향적인 수출정책이 더 우세했기 때문에 동아시아가 성장했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에 대비해서 경제주체들의 성격의 차이, 주요하게는 국가나 계급구조의 차이를 보는 시각은 우선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 국가의 능력과 자율성이 달랐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본고의 입장은 Lee(1993)와 Lee and Lee(1992)에서 보여지듯이, 초기조건과 정책의 효과의 측면을 같이 보아야 한다는 절충적 입장이다. 우선, 어떠한 경제정책을 택하느냐하는 것이 순수한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회의 세력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라고 볼 때, 단순히 경제발전 전략의 적절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왜 동아시아에서 수출주도적인 대외지향적 전략이 선택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본다.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를 대비할 때 계급구조의 차이나 국가의 성격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관계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는 국가 기구의 능력과 자율성 측면에서 동아시아 국가는 그 사회의 관계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즉, 동아시아 국가는 그 사회의 엘리트들을 기구 내로 잘 충원해 나가는 엘리트주의적인 국가였고 유교적 전통에 따라 사회에 대해서

에 국가에 의한 선별적인 회소자원(자본, 외환 등)의 재량적 배분에 따르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강한 국가의 자율성은 역사적으로 식민지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강한 자본가나 노동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도 연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위적 지위에 있었으며, 또 동아시아에 있어서 구 지배계급의 몰락에 따른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이 높았다는 면에서 軟性國家와 대비되는 경성국가였다. 이러한 점은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를 대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초기조건 차이이며, 동아시아의 국가는 '儒敎主義的인 硬性國家' 였다고 개념화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초기조건이었던, 국가의 능력과 자율성의 차이를 일단 파악하고 그 전체 위에서 구체적으로 경제정책 또는 국가가 어떻게 경제에 개입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개입을 볼 수 있는 바, 첫째는 국가의 경제개입이 근본적으로 금융적 통제, 즉 국가가 희소한 금융자원을 독점하거나 자기 통제하에 뒀으로써 사적자본을 자기의 일정한 통제하에 둘 수 있었다는 점, 둘째로는 공공목적과 사적자본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규율기제로써 단순히 시장이 의존했던 것이 아니고 국가관료와 대기업들 간에 형성된 네트워크에 의한 규율이라는 이중적 규율메커니즘을 동원했다는 점도 특이하다.

여기서 수출에 주력했다는 것은 보호된 독과점적 국내시장이 제공할 수 없었던 규율기능을 세계시장에 의해서 제공받음으로써 국내에서의 독재권력이 너무 방만해지거나 정경유착의 폐해가 너무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견제기능 및 경제적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는 경제정책의 실시를 견제하는 기능이 발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출주도정책이 가졌던 규율기능은, 수출의 통상적인 이점, 즉 선진자본이나 기술의 도입, 외환의 획득 등보다도 더 강조되어야 할 측면이다.⁽⁵⁾ 이렇게 볼 때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모델은 요약하자면 "민족주의적인 정서하에서 선별적 개입과 수출주도를 통한 대외지향적 후발자본주의 공업화"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Lee and Lee(1992)). 여기서 대외 지향성 또는 의존성은 분단이라는 왜곡과 식민지 경제의 대일 종속성이라는 두 요소와 어느 정도 관련이 된다고

(5) 외자조달의 방법으로서 한국과 같은 차관 의존형 대 직접투자 의존형의 대립이 존재한다. 어떤 조건하에서는 직접투자가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 등의 제 1세대 신흥공업국 다음에 출현한 말레이시아, 태국 및 심지어 중국에서는 직접투자의 역할이 크다. 필자는 중국을 대표적인 직접투자 의존형이라고 보는데 중국의 경우 많은 다국적 기업이 국내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입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에서 각국 국적의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한 완전경쟁적 시장구조를 창출하고 있다(이근·한동훈(2000)). 이런 점에서 국내 시장의 독과점 구조와 보호를 해외시장에서의 경쟁과 규율로 보충한 한국과 달리, 국내시장이 규율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그 대가는 자국 국내기업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독자적으로 또는 제휴를 통해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토착기업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차후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국가-대기업의 동맹에 의한 온정적 보호의 지속이 1997년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보아야 하겠고, 대외지향적 수출 주도 전략의 선택은 이를 포함한 초기조건 측면에서 설명되어야 하지만, 이런 전략 차이가 가져온 성과의 차이는 그 어느 시대보다 컸다는 면에서 전략의 중요성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5. 東아시아 危機에 대한 過多規制論과 過小規制論의 對立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고도성장 끝에 발생한 1997년의 아시아 경제위기는 신흥공업국의 그 동안의 성취를 하루아침에 無로 돌릴 정도로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1997년의 금융위기와 그 이후의 IMF 구제금융은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이른바 '기적'이라 불리우던 한국경제에 대한, 실천적인 그리고 학문적인 관심을 다시 한번 증폭시켰다. 한국 경제는 전례 없던 후발개도국의 성공사례로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의 위기는 이전의 성장체제의 문제점들을 결정적으로 드러내었던 것이다. 따라서 혹자는 그러한 문제점 많은 체제를 가지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것이 오히려 '기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도, 한국경제의 성공의 원인에 대한 논쟁, 즉 시장중심론 대 국가중심론과 같이 서로 대조되는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경제위기와 관련한 논쟁의 한 차원은 내부적 대 외부적 요인에 대한 논의이며, 다른 차원은 위기가 과도한 규제(over-regulation)와 관련이 있는가 아니면 준비 안된 자본 자유화 등의 과도한 規制緩和(over-deregulation)에 의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후자의 논쟁은 이전의 경제적 성공의 원인에 관한 논쟁과의 연장선에 서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성공에 대한 시장중심적 관점의 논의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나 정실자본주의 등을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Summers(1998), Brittan(1997), World Bank(1998)). 반면 경제적 성공에 대한 국가주의적 입장의 논의들은 국제적 자본의 규제완화에 대한 압력과 과도한 금융부문의 규제완화 등을 위기의 원인으로 주요인이라 주장하는 것이다(Eatwell(1998), Crotty(1998), Chang(1998), Chang *et al.*(1998)). 그러나 이러한 대비되는 두 견해 모두 어느 정도는 서로 보완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견해의 대립 중에서 부각되는 쟁점 중의 하나는, 우선 제도적 접근 쪽에서 성공의 원인으로 제시한 주요 요소 중에서, 개입주의적 국가와 다각화된 재벌집단이 오히려 현재는 위기의 원인 제공자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어떤 점에서 당연하다. 위의 두 주체가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였음을 고려할 때 성공의 주역이 위기의 주역과 같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내재적 논리가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등의 이슈일 것이다. 즉 이는 이러한 성공을 뒷받침했던 제도들이 잘 작동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고, 그 제도들의 내재적 한계는 무엇일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⁶⁾

이를 위해서 우선, 재벌과 정부 사이의 긴밀한 네트워크적 관계의 형성을 기적의 중요한 요소로 지목한 C. Lee(1992)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정훈은 이 논문에서,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이 거래비용경제학에서 원용한 이른바 '準內部組織(QIO)'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협조적인 정부와 사적기업간의 관계를 시장기구(market implementation)와 대비되는 준내부조직으로 파악하고 그 상대적 효율성에 주목한다. 즉, 비시장적인 위계적 배분메카니즘(non-market hierarchical allocation mechanism)이 의사결정을 전문화하고 소통비용(communication cost)을 최소화하며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투자와 경제발전을 촉진시켰던 것이다. 준내부조직은 다수의 시장 참여자 중 소수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러한 선택은 초기의 일 대 다수라는 조건을 일 대 일 조건으로 전환시킨다. 이러한 변환에 의해 형성된 준내부조직은 시장의 원거리관계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장기적이고 관계특수적인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준내부조직의 참여자들은 그 안에서 서로 고착되는, 즉 Milgrom and Roberts(1992)의 표현에 따르면 抑留(hold-up)될 위험에 직면한다. 결국 이러한 상호고착된 관계 속에서는 한 주체가 다른 주체를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정부-재벌 관계가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주는 데, 재벌은 그 경제력의 증대에 따라 그리고 정부에 의해 統制 받지 않는 금융자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부로부터 독립적이 되어갔으며,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준내부조직의 효율적인 작동은 성장지향성이 강한 정치지도력과 그리고 지속적인 규율과 그 검증을 필요로 한다. 즉 관료-기업간의 결탁에 의한 담합적이고 비효율적인 행동이나 과도하게 지속되는 보호는 견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1997년 위기의 요인들 중 하나는 한국이 재벌들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그것이 끝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대를 계속 허용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고성장의 시기에 수출성과는 지대의 배분, 즉 외환이나 은행신용을 위한 유일하고 명백한 기준이었다. 하지만 수출과 신용간의 연관은 점차 사라져간 반면, 자율적인 은행제도나 자본시장 등 기업부문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다른 신용배분의 메카니즘은 제도화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순

(6) 이하의 논의는 Lee, Lee and Lee(2001)에 의존하고 있음.

수한 경제적 성과에 기초한 지대추구가 아니라 로비 등과 같은 정치적인 성과에 기초한 지대추구를 낳았다. 정부관료는 신용할당과 자본시장에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 없이 계속 간섭하였으며, 나아가 대기업에 의해 점점 포획되었다.

이렇게 초기의 대칭적인 관계가 비대칭적인 관계로 퇴화되어, 억류(hold-up)의 문제 또는 소위 小數者 問題(small number problem) (Williamson(1975))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의 정부-재벌 관계가 이에 해당하는데, 정부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계속 재벌에 의존해야 했던 반면, 재벌은 정부로부터 점점 독립적이 되어갔던 것이다. 이러한 독특한 전환은 경제발전 그리고 금융자유화와 개방으로 인해 정부의 금융통제가 약화되고 재벌의 다른 투자재원의 조달이 허락되고 증대함에 따라 발생하였다. 1980년대 이후 정부는 강력히 통제되던 일반시중은행에 비해 보다 자유롭게 영업하는 다양한 비은행금융기관들의 설립을 허용하였는데, 재벌들이 바로 이들의 주인이었으며 이들은 재벌계 기업의 자금조달의 주된 창구로 이용되었다. 또한 1990년대에 정부는 金融開放을 통하여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재벌 등의 해외차입과 이들에 의한 투자를 증대시켰다. 이에 따라 재벌은 정부에 의해 통제되던 은행 대신 직접적 해외차입을 추가적 금융의 원천으로 가질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정책도 대안적인 금융자원을 획득하려는 재벌의 노력이나 로비의 결과였으며, 더욱 중요하게 이는 정부에 대한 재벌의 점증하는 권력과 압력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1993년 이후의 금융자유화는 재벌의 영향력 하에 진행되었으며 정부는 금융자유화 과정에서 금융 부문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 메카니즘 확립에 실패하였다. 이렇게 관리되지 못한 자유화가 결국 위기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성장을 요소 투입의 증가에 따른 外延的 工業化로 보고, 지속적인 투입의 증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련에서 성장률이 정체되었던 것처럼 동아시아의 성장이라는 것도 결국 정체될 것이라고 보는 크루그만의 시각은 일견 일리가 있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이 주장이 제기된지 얼마 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이 주장은 더욱 유명해졌다. 그러나 크루그만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의 성장은 소련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사적 기업과 시장기구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졌고 상대적으로 動態的 特性面에서 우월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미래의 성장 또는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것이 기존의 축적된 생산경험 또는 자본스톡의 양과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앰스덴의 견해나 이를 모델화한 주류경제학의 내생적 성장이론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동아시아의 성장 전망을 비판적으로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1997년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과거 모델의 한계를 露示한 것이긴 하지만, 특히 한국의 경우 정책 실패의 측면이 강하다. 이는 1998년의 마이너스 5% 성장이 1999년에는 10%의 성장으로 뒤집어지는 한국경제의 급속한 회복이 증명해 준다. 한국을

비슷한 동아시아의 후발공업국은 그동안의 '학습'을 위기의 경험 속에 한 순간에 다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며, 그 위기 자체가 어쩌면 이제 '혁신'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마지막 '학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6. 要約과 展望

본고에서는 지난 천년간 한국경제사의 네 중요한 쟁점을 일관된 틀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中世, 植民地期, 高度成長期, 경제위기 국면이라는 네 시기를 일관된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본고는 특정 시기의 경제발전을 결정하는 기본 요소로서, 초기조건 혹은 매기 초기의 발전 수준, 국제적 환경 내지 외부적 계기 그리고 주체적 대응전략 등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난 천년간 변화를 이해하고자 했다. 이런 시각에서, 조선시대에 대한 정제론과 내재적 발전론의 대립부터 시작해서, 식민지 공업화론 대 수탈론, 전후 고도성장에 대한 대립적 해석, 그리고, 1990년대 말의 위기의 원인론 등을 차례로 다루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고는 내재적 발전론이 조선사회정제론을 비판, 극복한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문명간 교류와 기술의 전파라는 외부적 계기를 소홀하게 다루고 발전적 양상을 과대평가한 문제를 가짐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근대화 선행조건의 충족도로 경제적 발전도를 평가하고, 그것이 근대문명에 대한 대응역량을 어떻게 규정하였던가를 탐구하는 접근방식을 제시하였다. 결국 선행조건의 낮은 충족도와 가혹한 외압의 상호작용으로 식민지화되고 말았는데, 우리의 입장은 내재적 발전만으로 근대화를 달성할 수 있었으리라는 전망과 아울러, 외부 조건이 우호적이었더라도 자주적 근대화로 나아갈 수 없었으리라는 전망을 모두 부정한다.

본고는 식민지수탈론과 식민지공업화론을 변증법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사론을 수립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식민지기에 근대적 제도와 사회간접자본의 구축 및 공업화가 진전하고 경제성장률이 3%를 넘은 점에서 단순한 수탈론만으로 식민지기를 이해하는 데에 한계를 가지지만, 경제가 현저히 비자립적이고 한국인 자본·기술력의 성장에 제약을 받아 自己充足的 動力을 가지지 못한 경제성장이었다는 점에서 근대화론 내지 개발론만으로도 한계를 가진다. 일본제국주의가 식민지화 이전에 부족하거나 결핍된 근대화 선행조건을 조선에 제공함으로써 조선이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는 사실은 조선사회정제론과 식민지근대화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식민지화 이전 한국사회의 성취가 식민지기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도 한 점을 식민지근대화론은 간과하고 있다. 식민지기 경제적 변화

와 성장은 전후의 고도성장의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하였겠지만, 고도성장을 개시할 시점에도 소득이 매우 낮고 물적 설비가 현저히 부족하였던 점에서 식민지근대화론은 한계를 가지며, 고도성장을 위한 중요한 내적 자산으로서 교육을 받은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은 기본적으로 한국 내부의 유산이란 점에서 내재적 발전론도 계승할 논점을 가진다.

본고는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의 원인에 대해서, 시장주의와 국가주의를 같이 보는 절충적 접근을 취한다. 즉 이 시기 경제성장의 두 축을 국가주도성과 대외지향성으로 보고, 전자에서 정부개입이, 후자에서 국제적 시장주의가 수용되었다는 것인데, 굳이 나눈다면, 이런 절충은 개입주의적 입장에 좀더 가깝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내부요인만으로 경제위기의 직접적 발생을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그 직접적 계기를 외부충격과 정부실책에서 찾고자 한다. 따라서 직접적 원인 설명으로 보면 대외부문에 대한 방만한 자유화 등을 중시하는 과소개입론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사적 시각에 볼 때, 위기의 직접적 계기보다는 위기로 향해가는 내부적 메카니즘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본고에서는 박정희 식 고도성장 체제의 한계가 무엇이었는가를 밝히는 데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살펴 볼 때, 어떤 시기에나 경제위기 상황은 기존의 이해관계의 대립을 누르면서 새로운 전략을 확정, 추진하는 계기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즉 1950년대 말 원조경제의 위기는 박정희 식의 고도성장 전략의 성립을 낳았고, 1979-1980년의 경제위기도 개발 전략의 일정한 수정을 낳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기말 경제위기는 새로운 전략을 요청,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초기조건이나 외부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략을 유연하게 변화,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부각되었다. 가령, 세기말의 경제위기는 초기조건과 국제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략의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오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크게 초기조건-전략-성과라는 세 요소로 분리하여 생각하여 볼 때, 본고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즉 전략은 주체에 의한 것이지만 상당한 정도 초기조건에 의해 그 선택의 폭이 규정받으며, 반면에 선택 후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선택된 전략의 내용과 초기조건을 같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후에 대외지향적 발전 전략의 선택은 그 이전의 식민지 유산과 미국주도의 세계질서 재편성 등 초기조건에 의해 상당한 정도 설명이 가능하며, 그 성과 또한 한국인의 인적자원의 질과 양, 국제적 조건 등에 의해 영향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략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곤란한데 그것은 잘못된 전략이 선택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고, 구체적 성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초기조건과 함께 전략의 내용을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經濟學部 副教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전화: (02)880-6367
팩시: (02)886-4231
E-mail: klee1012@plaza.snu.ac.kr

高麗대학교 經濟學科 教授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전화: (02)3290-2214
E-mail: leehc@korea.ac.kr

參 考 文 獻

- 金容燮(1974):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 一潮閣.
_____ (1977):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I), 一潮閣.
宋贊植(1997): 『朝鮮後期 社會經濟史의 研究』, 一潮閣.
安秉直(1995): 『韓國에 있어서의 經濟發展과 近代史研究』, 第38回 全國歷史學大會 發表
要旨.
梁秉祐(1971): “우리나라에도 封建制가 있었는가,” 『歷史教育』, 14.
李根(2000): “동아시아의 기적과 위기,” 『사회과학논평』, 사회과학연구협의회.
李根·한동훈(2000): 『중국의 기업과 경제』, 서울, 21세기북스.
이병천(1987): “「식민지반봉건구성체」의 이론적 제문제 — 小谷汪之·梶村秀樹의 이론을
중심으로 —,” 『산업사회연구』, 2집.
李榮薰(2000): 『韓國 市場經濟와 民主主義의 歷史的 特質』, 韓國開發研究院.
이헌창(1999): 『한국경제통사』, 서울, 법문사.
中村哲(1987): “近代東아시아像의 再檢討 — 1910-30년대의 中國 朝鮮을 중심으로 —,”
『經濟史學』 11.
溝口敏行 梅村又次 編(1988): 『舊日本植民地經濟統計 — 推計と分析 —』, 東洋經濟新報
社.
堀和生(1995): 『朝鮮工業化의 史的 分析』, 有斐閣.
宮嶋博史(1991): 『朝鮮土地調査事業史의 研究』,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

- 梶村秀樹(1977): 『朝鮮における資本主義の形成と展開』, 龍溪書舎.
- 白南雲(1933): 『朝鮮社會經濟史』, 改造社.
- 福田徳三(1907): “韓國の經濟組織と經濟單位,” 『經濟學研究』.
- 四方博(1933): “朝鮮に於ける近代資本主義の生成過程 — その基礎的考察 —,” 『朝鮮社會經濟史研究』 京城帝大法文學會 第1部論集 第6冊.
- 松本俊郎(1988): 『侵略と開發』, 御茶の水書房.
- 安秉珪(1975): 『朝鮮近代經濟史研究』, 日本評論社.
- 鈴木武雄(1942): 『朝鮮の經濟』, 日本評論社.
- Amsden, A.(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allassa, Bela(1988): “The Lessons of East Asian Development: An Overview,”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 Brittan, L.(1997): Asian Model R.I.P., *Financial Times*, 4 December.
- Chang Ha-joon(1994):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Policy*, St. Martins Press.
- _____ (1998): “Korea: The Misunderstood Crisis,” *World Development*, **26**, **8**.
- Chang Ha-joon, Park Hong-jae, and You Chul gyue(1998): “Interpreting the Korean Crisis: Financial Liberalization, Industrial Policy, and Corporate Governanc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2**, **6**.
- Crotty, John(1998): *Korean Economic and Political Crisis*, Mimeo.
- Eatwell, John(1998): “International Capital Liberalization: The Impact on World Development,” CEPA Working Paper Series I. 1,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 Eckert, C.J.(1991): *Offspring of Empir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Fine, Ben(1992): “Linkage and the State: the Case of South Korea,” Working Paper 2, Department of Economics, SOAS, University of London.
- Gerschenkron, A.(1966):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Kuznets, S.(1973): “Modern Economic Growth: Findings and Reflec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63**, **3**.
- Lee, Chung. H.(1992): “The Government Financial System, and Large Private Enterprise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Korea,” *World Development*, **20**, **2**.
- Lee, Chung H., Keun Lee, and Kangkook Lee(2001): “Chabols,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 Crisis in Korea,” Working Paper,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NU.
- Lee, Keun, and Hong Yung Lee(1992): “States, Market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Development Policy Review*.
- Lee, Keun(1993): *New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M.E. Sharpe, Inc.
- Lee, Keun, Yifu Lin, and Ha-Joon Chang(2000): “Late Industrialization and Late Marketization: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East Asian,” Working Paper,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NU.
- Milgrom, Paul, and John Robert(1992): *Economics, Organization & Management*,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Myer, R., and M. Peattie(eds.)(1984): *The Japanese Colonial Empire 1895-1945*,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alais, J.B.(1996): *Confucian Statecraft and Korean Institutions*,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Rostow, W.W.(1960):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A Non-Communist Manifesto*, Cambridge.
- Suh, Sang-Chul(1978): *Growth and Structural Changes in the Korean Economy 1910-1940*, Harvard University Press.
- Summers, Laurence(1998): “Opportunities out of Crisis: Lessons from Asia,” Treasury News, March 19.
- Williamson, Oliver(1996): *The Mechanisms of Governa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75): *Markets and Hierarchies: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s*, New York, The Free Press.